

제1절 남북대화 추진경과 및 체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는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 체육, 적십자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남북관계발전 및 북한변화에 기여하여 왔다. 2003년도 남북대화는 급박한 정세와 회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어 총38회(연 106일)의 회담이 개최되었고 30건의 합의문건이 채택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 30년간 총 360여회 회담을 통해 51건의 합의문건이 채택된 점에 비추어보면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된 이래 2003년도 남북대화는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노력을 병행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남북대화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례화·체계화 하여 현안 해결의 상시적 창구로 활용하며, 국제적 화해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 각종 남북대화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2003년 1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대북화해 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유효함을 거듭 확인하였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등의 원칙은 남북회담 분야에서도 적용되었다.

참여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에서 유지해온 남북대화 체제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회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남북회담이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회담행사를 간소화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제도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남북회담은 점차 정례화, 전문화, 실무화, 일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담소재도 군사실무회담을 비롯하여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경협제도, 청산결제, 해운협력, 금강산면회소건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참가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관계 중심협의체로서 남북관계 전반의 틀을 짜는 한편,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있다. 2003년도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문제 외에도 3대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 이산가족 상봉,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참가,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군사회담 등 남북한간의 주요 관심사도 협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이행실태 점검, 제도적 장치마련 등 경제분야 제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해운협력, 경협제도, 청산결제 분야 회담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한편 인도분야 회담기구로서는 적십자회담이 있으며,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인도적 물자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회담기구는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남북장관급회담의 별도 협의체로 남북사회문화분과회의를 검토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회담 개최현황]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112	2	5	26	8	33	38
정상회담(12)	남북정상회담	1			1			
	남북특사접촉	3			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			5			
	통신·보도 실무접촉	2			2			
	의전·경호 실무접촉	1			1			
장관급회담(13)	장관급회담	12			4	2	2	4
	실무접촉	1					1	
군사분야(24)	남북국방장관회담	1			1			
	남북군사실무회담·접촉	9			3	2	3	2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경제분야(3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7			1		2	4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2			2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3					1	2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8					3	5
	임남담·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1					1	
	인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2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3					2	1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1						1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적십자(13)	남북적십자회담	5			2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5					2	3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체육분야(3)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남북특사회담(3)		3			1		1	1
정상회담이전 남북회담(7)	남북당국대표회담	1	1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	1					
	남북지관급당국회담 접촉	5		5				

제2절 대통령특사 방북

20 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력 외교를 전개하였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2003년 1월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에 특사를 파견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장조율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월 10일경 북한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2003.1.21-24)중 북한측은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옴으로써 1월 24일 남과 북은 대통령 특사의 방북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대통령 특사 방북 관련 발표문>—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1월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을 대표해서 이종석 인수위원이 함께 간다.

이번 특사방문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임성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이 수행한다.

대통령특사의 방북은 2003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특사 일행 8명은 2002년 4월 방북시의 전례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여 방북, 귀환하였다.

특사는 체류기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김용순 비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북한측 고위 인사들과 북핵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북한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 내용을 전달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특사를 보내 따뜻한 조언이 담긴 친서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하고 이 말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 임동원 특사는 방북기간 동안 북한측이 취한 핵 관련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핵의혹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과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철회, 핵동결 해제 조치 원상복구 등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농축우라늄 계획 의혹의 해명과 이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우리측 설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이제까지 밝혀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였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는 개발할 의사도 없다”,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다.”, “핵문제는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쌍방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남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우리측이 남북 군사당국간에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해결된 만

금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를 촉진하여 2월에 완료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측이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차기정부도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며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한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당선자측 대표인 이종석 인수위원은 당선자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핵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3절 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남북을 오가면서 12차례 개최되었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들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분야별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2002.10.19-22, 평양)에서 제9차 회담을 2003년 1월 중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9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1주일 정도 연기된 일자로 수정 제의함으로써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문석(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조성발(내각사무국 참사)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허수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처장)

제9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수 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특히 북한이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동결 해제조치를 원상복구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이 2003년 1월 10일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으며,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실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북한측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로서, 북·미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3박 4일 회담 기간 동안의 우리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경협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도로 연결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에 합의하였다.

특히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4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도 장관급회담이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제9차 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교류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그리고 차기 회담 일정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종료되었다.

한편 제9차 장관급회담 기간 중 북한이 우리측 특사 파견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측 특사가 1월 27일부터 29일까

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
-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
-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003년 1월 24일

서 울

2.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0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제9차 회담시 합의에 따라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한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우리측의 이른바 「초경계태세」를 문제삼아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못하였다. 결국 제10차 회담은 당초 합의보다 20일이 지난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새정부 「평화번영정책」의 구상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뒤 대화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협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처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측은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원칙과 신뢰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제 남북관계가 전술과 기교로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제10차 장관급회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장관급회담이 10차례 개최됨으로써 역대 남북회담중 처음으로 두자리 숫자 개최 회담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측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대화가 계속 이어진 것은 남북대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편 참여정부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에 변경이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광립(재정경제부 차관) 오지철(문화관광부 차관) 신언상(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조성발(내각사무국 참사)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허수립(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처장)

우리측은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새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의 기초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이 기회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핵활동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언급해온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2.2.19)에서 합의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유관국과 대화를 시작한 만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10차 장관급회담 직전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 북한측에 대해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향후 남북관계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원칙과 신뢰

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상봉문제, 국군포로·납북자문제들을 협의·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새 정부가 6.15 공동선언 준수·이행을 확약하고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면서,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북은 두 차례 전체회의 이외에도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가지며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회담 마지막 날까지 핵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핵문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북간에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북한측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남북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제10차 장관급회담을 종료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종결회의에서 우리측 강원도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약>—

-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준수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
-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이 잘 진행되고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원
 - 금년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 추진
- 남과 북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관광사업,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5.19~22간 평양에서 개최
-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
 -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도 빠른 시일내에 개최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9-12간 서울에서 개최

3.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합의사항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5.19-23, 평양)와 제8차 군사실무접촉(6.4, 판문점), 제5차 철도-도로실무접촉(6.7-9, 개성), 제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7.2-4, 문산),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실무접촉 등이 차례로 개최되었다. 특히 철도-도로실무접촉과 실무협의회는 개성과 문산에서 출퇴근 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행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이 군사분계선상에서, 6월 30일에는 개성공단 착공식이 각각 진행되었다.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당초 합의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쌀 40만톤과 비료 20만톤의 대북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에서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4.23-24) 이후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담 직전인 7월 8일 “핵재처리를 완료했음”을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제11차 회담의 최우선 목표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두었으며, 최소한 남북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1차 회담은 제10차 회담시 합의에 따라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개발 불용,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을 북한측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집중적으로 촉구하였다.

특히 △미·일·중·러 등 국제사회가 모두 다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있다는 점(불가피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유용성)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조속히 다자회담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시급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도 논의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과 남북경협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문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안들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주적론 등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위기를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공조를 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문제 등 남북 현안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밝혔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6개항의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지속적인 설득에 힘입어 쌍방은 북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북한이 다자회담 참여 등 대화를 통한 해결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쌍방은 남북관계 진전문제와 관련 △추석계기 제8차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구성 △민간단체들의 8.15 광복절 행사 협력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8.26-29, 서울) 및 제12차 장관급회담(10.14-17, 평양)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회담기간중 4개 경험합의서 발효절차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약> —

- 남과 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모색
-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8.26-29, 서울) 개최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
 - － 이 회의에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의 교류협력 및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
-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 적극 지원
- 제12차 장관급회담을 ' 03.10.14-17 평양에서 개최

4.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1차 회담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고, 후속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오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남북간 화해협력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9월 1일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되고, 9월 15일에는 평양관광이 시작되었다.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식량분배 현장확인도 북한측의 협조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개천절 행사를 비롯하여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 등 민간차원

의 교류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담 직전에 이르러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생겨났다.

북한이 이른바 6자회담 무용론과 핵억제력 강화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0월 2일에는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재처리 플루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10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장관급회담 북한측 대표를 일부 교체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김만길·조성발 대표를 대신하여 최영건 건설건설공업성 부상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새로이 회담대표에 합류하게 되었다. 북한측은 또한 최영건 대표가 기존 박창련 위원장 대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점진·보완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제12차 회담에 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공식 회담 및 접촉은 물론, 만찬·환담 등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모든 발언기회를 통해 북한측에 「핵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한 발표는 사실여부를 떠나 북한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관련국가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의 발표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상

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나 발언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제1차 6자회담 합의사항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환기시키고 6자회담에 참가했던 나머지 국가들이 2차회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측도 조속히 성의를 가지고 제2차 6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함께 우리측의 핵불용 및 평화적 해결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북한측이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진행중인 남북경협을 차질없는 추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확대 및 제도화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先 핵포기」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북한측은 또한 남북민간교류가 활발하다고 평가하면서도 8.15행사 등에서의 북한체제 비난문제, 개성공단 공사 부진, 이산가족면회소 협의 부진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8.15 민간행사,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거론하면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반북단체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공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하여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표본사업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밖에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내년 추석까지 완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항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것이라고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회담기간중에 나온 핵억제력의 물리적 공개 시사(10.16, 외무성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바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측의 의도를 불신하고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남북대화 무용론과 남북관계 중단까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하였다.

즉 외무성 발표는 북한의 대화에 의한 해결 입장을 표명한 것인바, 미국이 先 핵포기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최근 뉴욕접촉까지도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의지를 밝히는 수단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어떠한 대화의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서서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회담기간 내내 북한측이 6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측의 진전된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회담기간중 북한의 「핵억제력의 물리적 공개」 시사 발언이 불거져 나오고 북한측이 △반북단체 해체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회담이 결실

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측은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추후 회담 일정에만 합의하고 제12차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
- 진행중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11월초 평양에서 개최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2004.2.3-6간 서울에서 개최

제4절 군사분야 회담

북 한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간 군사분야 회담은 꾸준히 진행되어 군사실무회담 2회, 군사실무접촉 4회,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회 등 총 8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내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 임시도로 노선을 본도로로 변경하는 보충합의서,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의서 등 3건의 합의를 채택·발효시켰다.

특히 2003년 6월 4일 개최된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철도·도로공사현장 상호확인 계획에 합의, 6월 11일 상호 현장확인을 진행하였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남북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상대측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이다.

1. 남북군사실무회담 및 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2년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개최, 다음날인 9월 19일부터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를 개시했다. 우리측은 2002년 12월 11일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2002년 12월말 경의선 철도 궤도부설을 끝내고 2003년 5월 17일에는 경의선 도로노반공사를 완료하였다. 현재 경의선은 도로포장공사까지 완료('03.9.18)되었으며, 동해선의 경우에는 도로노반공사와 궤도부설작업이 진행중이다.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임시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02.8.27-30)에서 동해선 임시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02.12.15-17)에서 철도·도로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임시도로 개통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2002년 12월 23일 '평화의 집'에서 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2003년 1월 27일 '통일각'에서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군사실무접촉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목 (국방부회담운영과장, 대령)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이명훈(1사단 부사단장, 대령) 정영도(군정위 연락단 부단장,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 제9차 접촉시 배경삼 → 김상남으로 교체

제7차 군사실무접촉에서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주체와 관련한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는 원칙하에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북이 직접 통보하여 처리하는 간소화된 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 북한측이 수용함으로써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잠정합의서 요지>

-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해야 함.
 - －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협약처리
-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2003년 6월 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8

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는 북한측이 철도·도로노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반적인 공사를 균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공사진행 상황을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방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북한측의 제의에 관해 토의를 진행하여 2003년 6월 11일 각각 10명의 인원이 동·서해지구 철도·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내용의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확인계획」에 합의하였다.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확인계획 요지>

- 날짜 : '03.6.11
- 시간 : 동해지구 남측지역 09:00-12:00, 북측지역 14:00-17:00
서해지구 북측지역 09:00-12:00, 남측지역 14:00-17:00
- 확인인원 : 동·서해지구 쌍방 각각 10명
- 방문구역 : 쌍방 남북관리구역 전 구역

한편 개성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03.8.21-22)에서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노반공사가 완료('03.5.17)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문제 논의를 위한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우리측의 제의에 의해 2003년 9월 17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군사실무회담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목 (국방부 회담운영과장,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김지호(합참 남북교류협력관, 대령) 이명훈(1사단 부사단장, 대령) 길강섭 (경의선 동해선 계획관, 중령) 김경중(건교부 남북교통과장) * 제9차 회담에서 김지호→이순진, 김경중→김동서로 교체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김상남(인민무력부, 상좌)

제8차 군사실무회담에서 쌍방은 ‘보충합의서’(안)을 상호 교환한 후, 수 차례에 걸친 문안조정을 통해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시(’03.1.27) 채택·발효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중 임시도로 연결지점의 군사분계선 개방을 규정한 제1항을 수정·보충하는 ‘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보충합의서’는 서명·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되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은 2003년 9월 18일부터 불편한 임시도로 대신에 노반작업이 완료된 기본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충합의서 요지>—

- 쌍방은 2003.1.27 체결한 잠정합의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장보충
 - 쌍방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
 -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새로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 10m, 서해 20m)을 개방
 - 이미 이용하던 임시도로상의 10m 군사분계선 구간들은 폐쇄

남과 북은 제9-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9차 : '03.11.14 평화의집, 10차 : '03.11.28 통일각)과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03.12. 23 평화의 집)을 통해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설치·운영문제도 협의하였다. 이 문제 협의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에 따른 것이다.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제6항은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초소를 설치하며, 그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은 건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3년 11월 8일 남북이 초소의 규모와 형태를 같이 하고 공통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제의,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제9-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하여 초소의

형태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경비초소의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6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한 협의를 거쳐 이견을 완전히 해소한 후,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03.12.23)을 개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비초소는 △철도·도로의 안전상태 관측 △통과 차량의 안전 운행 보장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 감시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의 통과 등의 임무를 수행
-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 옆에 각각 1개씩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 개시
- 근무인원은 쌍방 각각 3명으로 하고,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
 - －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 휴대하며, 근무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 유지
-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 현장군 사실무 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하되, 필요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사이에 해결

2.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 제4조 4항은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을 연결”하며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다음” 연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선 남북 공사현장간 통신선은 2002년 9월 25일 연결되었다.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03.6.4)시 우리측은 다시 동해선 통신선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북한측도 동의함에 따라 2003년 6월 20일 제1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이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연결지점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통신선 연결구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2003년 11월 21일 개최된 제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 제4조 4항에 따라 동해지구 쌍방 공사현장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2003년 12월 5일 유선통신 2회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동해선 통신선은 합의대로 2003년 12월 5일 연결되었다.

접촉에는 쌍방 동해지구 공사현장 군사실무책임자가 참석하였는 바, 우리측에서는 임봉래 대령 외 4명이, 북한측은 엄창남 상좌(2차 접촉에서 박기용 상좌로 교체) 외 4명이 참석하였다.

제5절 경제분야 회담

20 03년은 북한의 NPT 탈퇴와 핵시설 재가동 등으로 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남북경협에 추진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회담을 추진하였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3대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경협관련 각종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내외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협분야에서 이 같은 노력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2.16, 평양)에서 구성·운영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 12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총 7차에 걸친 회담이 개최되어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전력협력 등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왔다.

가. 제4차 회의

2002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북한 핵문제와 철도·도로연결 및 개성공단건설 착공 문제 등 남북간 기 합의된 경제협력 현안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협의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협사업의 마무리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완료와 개성공단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남북 양측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진강 공동조사를 3월중 실시하고,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와 식량 및 자재·장비 제공 관련 분배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와 관련해서는 「동시연결·동시개통」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해선의 온정리-저진간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해운협력,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등 경협사업과 관련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합의문안 토의과정에서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적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하였으나, 북한측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착공, 임진강 공동조사 추진 문제와 식량 및 자재·장비 차관 제공 관련 현장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을 마무리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

나. 제5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당초 합의된 4월에서 연기되어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5차 회의는 회의기간 중 북한측의 돌출발언으로 인해 회담일정이 하루 연장되는 등 난항을 거듭한 회의였다.

전체회의시(5.20) 북한측이 기본발언을 통해 한미공동성명의 「추가적 조치」와 관련 “반북대결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주장을 함에 따라 5월 22일 오후까지 실질문제 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담이 공전되었던 것이다.

한편 참여정부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차관이 교체됨으로써(윤진식→김광림) 우리측 대표단에 변경이 있었다.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북한측은 한·미공동성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만약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방향으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령(零)으로 될 것이며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쌀지원,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업지구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전력협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5개항의 합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경협의 원칙등을 설명하고 안정적 경협추진을 위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기존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재난」 발언과 관련 우리측은 공식일정을 연기하면서 북한측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강한 입장에 난색을 표시하다가 5월22일 오후 “「재난」 발언의 근본취지는 대결이 격화되어 북남관계가 령으로 되고 재난이 닥쳐와 북이나 남이나 불행하게 되지 않고 다같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음을 명백히 하게 됩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쌀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50만톤 제공을 요구하면서 한꺼번에 50만톤을 제공하는 것이 준비상 어렵다면 우선 20만톤을 5월 하순 중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지원하겠으나 지원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문제 등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금강산 육·해로관광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기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였으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결국 양측은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고 궤도 연결행사를 6.10일경 진행하기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합의문 요약>

- 경의산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 궤도 연결행사는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6월 10일경 진행
 -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개성공단 건설
 - 착공식은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6월 하순 개최
 - 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6월중 공동조사, 장마전 홍수예보체계 구축
 - 북측은 장마에 대비, 임남댐 방류와 관련 필요한 통보 실시
- 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
 - 4개 경협합의서, 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통신·통관·검역 합의서 등을 필요절차를 거쳐 조기 발효
- 금강산 관광 활성화
 - 육로 및 해로관광 6월중 재개 적극 노력
-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식량차관 제공 합의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8월 하순, 서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 실무접촉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

다. 제6차 회의

2003년 5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일부 위원이 교체된 가운데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정부의 인사변동으로 인해 우리측 대표단 중 권도엽 위원(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영철 위원(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 위원(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새로이 임명되었으며, 북측은 김병철 위원(국토환경보호성 국장)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경협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3대 경협사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년내 경의선 철도와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연결하고 동해선 철도도 조기에 연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위규정의 조기 제정·공포와 차질없는 공단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북한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을 정례화하고, 특구경계를 확정하며, 통행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식량분배현장 방문을 동·서해 각 1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9월 중에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경협 발전에 있어서 故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의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2003년말까지 개성-문산, 온정리-저진간 철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동시에 완료할 것을 주장하

였다.

개성공단 개발은 현대아산이 개발 당사자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당국이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와 부속합의서의 토의를 시작할 것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북아전력망 형성과 가스관 부설문제를 논의할 것과 상품·임가공 직거래 방식 확대, 선박 해체업·대외건설 분야 협력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양측은 경험관련 제도적 장치 확충문제, 3대 경험사업, 직교역 방식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드러냈다.

우리측은 남북간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박해체업·대외건설 협력 등 민간차원의 경험사업도 개인사업자들에 맡겨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한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현지확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9월 중 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매듭짓고 10월 중 현지조사 실시를 촉구하였다.

식량분배현장 방문은 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시 합의에 따라 동·서해안 각 2곳에 대해 9월 중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경제시찰단 상호방문 문제는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쌍방은 식량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실시하는 문제, 직거래방식 확대 등 9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 <합의문 요약> —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 남측은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
- 개성공단 개발
 - －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
- 금강산관광
 - －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 이행 협력
- 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
 - －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 관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 동시 개최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직거래방식 확대
 - － 남북간 직접거래방식 확대와 그와 관련한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 추진
-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 － 남측경제시찰단 북측 방문,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식량분배현장 확인
 - － 이미 제공된 쌀 10만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은 9월 중,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 5~7명씩
-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

라. 제7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북한측 위원장이 교체된 가운데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측이 전력협력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가운데 양측은 경험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북측 회담대표단 중 제1차 회의부터 계속 위원장을 맡아왔던 박창련 대표가 최영진 건설건설공업성 부상으로 새로이 교체되었다.

북한측은 전력협력이 경험사업의 선차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공사현장 방문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개성공업지구 건설문제에 우리측 당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와함께 청산결제합의서 후속조치문제 토의를 위한 청산결제분과 구성을 제의하면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의 타결과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식량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방문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의 성과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회의 중반까지 북한측은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며, 동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들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우리측은 현 단계에서 전력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업들에도 장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

하였다. 결국 북한측이 회의 3일째인 11월7일 전력협력 문제를 철회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2004년도 개성공단 건설공사의 본격 추진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내 하위규정의 공포와 통행합의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개설, 경제시찰단 교환방문, 식량분배 현장방문(3·4차), 제3국 불법어로 공동대처 등의 문제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철도·도로공사 구간 현장방문 문제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의 조속한 타결, 해운합의서 2003년도 내 발효, 청산결제 분과 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양측은 상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적 협의과정을 거쳐 2004년도부터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결과 철도·도로공사현장 상호방문, 개성공단 건설 일정, 청산결제 시범실시,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개설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 <합의문 요약> —

- 철도·도로 공사현장 상호방문 실시
 - － 경의선(12.8) : 판문역~도라산역, 동해선(12.2) : 남북관리 구역내
 - －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2~5, 속초) 개최
- 개성공단 건설
 - － 금년내 하위규정 제정·공포 및 1단계 구역 설계 완료
 - － 내년초 기반시설 건설 착수 및 내년 상반기내 1만평 규모 시범 단지 개발
- 청산결제
 - － 내년부터 청산결제거래 시범적 실시
 - － 청산결제 실무협의(11월 하순, 평양) 개최
- 해운합의서 및 임진강 수해방지
 -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
- 직거래 확대 등 협의를 위한 사무소
 - －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성공단에 설치
- 경험관련 회의
 -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경험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11월 하순~12월 초순, 평양 또는 개성)
-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 04.3.4~3.7, 서울 개최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지금까지 4차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는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문제와 청산결제·일반결제은행 지정문제, 원산지확인, 통행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를 협의하여 왔다.

제1차 회의('02.12.11~13, 서울)는 통행합의서 채택문제, 상사중재위 구성 등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성과없이 종료하였다.

그러나 제2차 회의에서는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3차 회의에서는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하였다.

통행에 관한 문제는 신변안전보장문제와 관련 북측의 형사재판권 인정 여부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이가 커서 제4차 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통해 토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제2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당국간 회담에서 처음으로 우리측 차량을 이용하여 개성까지 출퇴근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4개 경협합의서 발효절차 마무리와 그 후속조치(청산결제, 상사중재위 구성·운영), 통행합의서 채택, 원산지확인절차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성진(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윤선호(무역성 법규국 부국장) 최정원(출입국 사업국 처장)

* 2차 회의시 우리측 엄종식 대표가 김호년 대표로, 북한측 김기문 대표가 최정원 대표로 교체되었고 3·4차 회의시 우리측 김성진, 구본민 대표가 임영록, 이승섭 대표로 교체

4개 경험합의서의 발효절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문본내용과 교환일자 등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200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소개하며 발효문본을 이번 회담에서 교환하자고 주장하였다.

남북은 발효통지문본 내용에 합의하고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교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통행합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의 현황과 개성·금강산지구에 적용될 합의서를 채택하지는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통행에 관한 합의서」(개성·금강산 통행합의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적 건설과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포·구금·압수·수색 금지 및 북한측법 위반시 우리측으로의 강제송환 보장 등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이 명시되어야 하며 우리측 당국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만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강제송환 규정은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이기 힘들

며 개성·금강산 지구에 북한측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청산결제은행」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한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을 지정하고 청산결제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상사중재위 합의서) 채택문제는 위원회의 재판기능(중재판정 취소신청, 당사자 이의 신청 등)을 상사중재위 합의서에 규정하는 문제, 회의 개최요건과 회의결과 공개여부 등에 대해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추후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원산지확인 문제는 1차 회의시 쟁점사항이었던 원산지확인기관 선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산지확인제도의 취지와 국제적 관례를 고려해 볼때 세관이 확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북한측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고 북한측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하자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남북은 남측은 세관, 북한측은 민경련으로 하되 쌍방 당국이 동 기관들의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를 교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은 5개항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와 10조로 구성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원산지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2003년 8월 6일 교환하기로 합의되었던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과 우리 시민단체들의 8·15 반북 집회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되었다가 8월 20일에 교환되었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
-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
-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제3차 회의의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 <4개 합의서 발효통지문> —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김령성 귀하

나는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고 채택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20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 세 현

— <4개 합의서 발효통지문> —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정세현 귀하

나는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서명하고 채택된 《북남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북남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북남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북남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20일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령성

주체 92(2003)년 8월 20일

— <남북 원산지 합의서 요약> —

- 적용범위
 -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증명서 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과 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
- 원산지증명서
 -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
- 원산지 판정기준
 -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등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
 -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 또는 남에서 진행된 경우
 -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로 불인정
- 원산지 확인절차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
 -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
 - 확인결과를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산지 확인기관
 - 남측은 세관,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함.
 -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과 변경사항을 통보
- 원산지증명서 면제
 -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 탁송품이나 여행자 휴대품, 정상교역 물품 등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협의

나. 제3차 회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 까지 문산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측 대표단은 북한측 차량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출퇴근하였다.

양측은 「남북상사중재위 합의서」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원산지 합의서」 이행에 따른 문제, 법령교환문제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는 위원회 기능의 합의서 명시, 위원회 개최와 회의의 공개여부 등 그동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북한측이 우리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통행합의서에 관해서는 가장 쟁점이 된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일부조항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의 주권침해를 비롯하여 범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북측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북한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질서위반자는 남측지역으로 강제송환하며 그에 대한 조사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국·과장급 3명을 대표로 하는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2003년 12월 말까지 민경련 외 북한측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는 통일부 고시가 민경련을 원산지증

명서 발급기관으로 인정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우리측은 동 경과규정이 입법관행으로 남북교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경협관련 쌍방 법령교환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북한측의 기본법령, 개성·금강산 지구 개발, 철도·도로연결, 통행·통관·검역·통신·투자·세금·무역 등 경제관련 법령들의 목록을 전달하였다.

또한 청산결제와 관련하여 청산결제 한도·대상품목·이자율 등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청산결제 한도·대상품목 등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신용한도·이자율 등은 은행간 실무접촉을 통해 결정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은 5개항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과 14개항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상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원산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11월중 시범적인 확인사업 실시 합의
-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은 차기 회의에서 협의
- 경제협력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절한 시기에 상호 교환
- 제4차 회의 일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결정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요지> —

- 위원회의 법적 지위
 - －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짐.
 - －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 보유
- 위원회 구성
 - －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
- 위원회의 기능
 - －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안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
- 위원회 결정의 효력
 - －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불가
-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 － 위원회 회의는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소집
-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 －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
- 위원회의 활동보장
 - － 남과 북은 분쟁사건 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
 - －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

다. 제4차 회의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와 경협관련 남북간 통신연결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통행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 인원의 체포·구금·압수·수색 금지 및 위법행위시 강제송환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범질서위반자에 대해서는 북한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선 출입과 체류 절차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고 신변안전보장을 포함한 형사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추후에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범질서 위반시 강제송환 원칙 등 신변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쌍방은 당면하여 남북경협을 진행해 나가는 데 남북간 직접 통신연결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통신망 연결문제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남측의 통신업자가 직접 연결하고 개성공단에서 북한측 지역은 개성전화국을 거쳐 연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남북간의 통신연결은 물론 남측지역과 개성공단간의 통신도 북한측의 개성전화국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이 남측과 개성공단은 통신사업자가 직접연결하기로 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으나 더 이상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서울-개성-평양간 직접 통신망을 연결한다는 데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연결방법은 추후 통신분야 실무접촉을 열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경제관련 법령 교환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요구할 법령목록을 전달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
-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
 - 서울-개성-평양간에 연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
 -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

3.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2003년 9월 29일 발효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손병조(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응섭(민족경제협력연합회 책임참사)
대 표	정승훈(통일부 교역과장) 심성근(산자부 수입과장)	김철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우리측은 「남북 원산지 합의서」 제8조 1호 나목과 제4호, 제4조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확인(판정)세부기준에 대한 합의서」를 협의하고자 제의하고 민경련이 발급한 증명서라 하더라도 세부판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남북 원산지 합의서」 제4조 제2호의 열거규정만으로도 원산지판정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며 쌍방 당국이 인정한 발급기관이 있는 만큼 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통일부 고시의 경과규정(북한측 민경련 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인정)이 합의서 위반이라며 남측의 합의서 이행의지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경과규정이 교역업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이며 12월 말로 완료됨을 설명하였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재 남북간 간접교역 비중이 60-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간 직교역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설득하였다.

남북은 2004년 1월 중에 원산지확인사업의 시범적 실시를 완료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원산지제도에 대한 쌍방의 제도나 공정교역과 통관절차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교환 추진,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의 정기적인 상호통보 등에 합의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남과 북은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
 - 통보내용에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포함
- 남과 북은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
- 제2차 회의의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4.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청산결제 실무협의를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응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대 표	이성환(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진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청산결제 문제는 일부 논의사항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기도 하였으나 당국의 역할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였다.

북한측은 청산결제의 거래당사자는 남북한 당국이 되어야 하며 거래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 구매 등도 당국간에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산결제 한도는 1천만~3천만 유로, 신용한도는 20%, 이자율은 민족내부거래이므로 무이자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당국은 청산결제 대상품목과 한도 등 제도적 틀만을 만들어 주고 직접적인 거래는 개별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신용한도는 청산결제한도의 10% 수준으로 하고 이자율은

2%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남북간 청산결제 대상 품목은 서로간 반입을 회망하는 품목과 한도 안(案)을 교환하여 검토 후 결정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남북 양측은 상호간 입장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차기연도 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 만~3천만 달러 범위내
-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 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
-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5.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6.15 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협의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제1, 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문산-신의주) 철도 복원과 도로(문산-개성) 연결에 합의하고, 임동원 특사 방북시 동해선 철도·도로도 조속히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02.9.13~17, 금강산)를 개최하여 경의선의 경우 개성-문산간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동해선의 경우 철도는 온정리-저진간, 도로는 고성-송현리 구간을 연결하되, 우선 12월초부터 차량이 다니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차례의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인도·인수절차 및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등에 합의하고,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2003년 한해 동안에도 2차례의 실무협의회와 5차례의 실무접촉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쌍방은 철도·도로연결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기 위해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을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도 마무리하였다. 남북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은 2003년 6월 30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궤도연결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이성환(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철도성 과장)

※ 우리측은 실무접촉시에는 조명균 수석대표와 김경중 대표만 참석

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일정 ▲궤도부설 및 전체제 공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을 타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경의선 철도는 2월 중순에 연결하여,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남북 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분 계역인 군사분계선-관문역간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우선 적으로 북한측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시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경의선 철도를 연결 한 후에 열차와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속히 열차 운행기본합의서를 타결하며, 남북간 열차·차량운행사무소도 개설하

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양측 분계역간 연결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동시에 개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열차운행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면서도, 경의선·동해선 동시연결문제가 합의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남북 쌍방은 경의선 철도 개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합의문으로 발표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
 - * 각 구간별 연결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약해결
-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 1차분 및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제공
- 남과 북은 열차운행합의서를 상호 교환,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은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 접촉을 통해 협약확정

나.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4차 접촉은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용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과 이용 결과 통보형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정부대표단으로서는 최초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개성 「자남산려관」까지 이동하였다.

우리측은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문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3월 하순경 착수와 이에 따른 궤도 자재·장비 제공문제 △1차 제공분 품목과 수량 조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용현장 방문과 사용결과 정례적 통보문제는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각기 3.24~26, 3.28~30에 경의선·동해선 현장방문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사용결과 통보문제는 우리측 입장에 공감하나, 현장방문은 고장난 설비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대책을 중심으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서해선 동시병행 원칙을 재천명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착공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궤도 연결행사를 생략하되, 3월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각기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대응하였다.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3월말 착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
-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 인원들의 현장 방문 진행
 - － 경의선은 3.20-22, 동해선은 3.24-26 각각 진행
 - － 기술인원 : 단장(대표1명), 기술인원 4-5명 포함, 총 8~9명 정도
 - － 왕래 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
 - － 북측은 현장방문 5일 전에 1월까지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및 현장방문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매월 사용결과를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명의로 남측에 통보
-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함.
 - * 첨부 1 : 궤도 자재 37, 장비 31,
 - * 첨부 2 :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자재 : 33→35개 품목, 장비 : 측량장비 등 추가)
-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자재·장비들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자재·장비 전체 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약해결

다.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행사를 6월 10일경에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결행사 개최문제와 철도·도로연결에 따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2003년 5월)에서 경제분야 실무회담을 개성과 문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측 대표단이 회담기간 중 매일 오전 9시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북했다가 오후에 귀환하는 「출퇴근회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연결행사를 6월 12일에 실무협의회 대표(국장급) 주관하에 각기 40여명이 참석하는 수준에서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신호·통신·전력계통의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고 사용현장을 정례적으로 방문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월 14일에 행사주빈으로 장관 또는 차관급이 참석하고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연결행사를 의미있게 치르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서 각 2회씩 고장장비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운전을 위한 기술지원도 동·서에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유류와 시멘트 등의 제공량을 증가시켜 주도록 요구하면서, 신호·통신·전력계통 현장조사는 북한측 사정을 감안, 7월 10일부터

12일,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하자고 제의하였다.

회의결과 남과 북은 연결행사 개최문제, 고장장비 수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에 합의하고, 5차 실무접촉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3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요약>—

- 남북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산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
 - － 행사참가인원은 행사 2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
 - －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 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
-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에 진행
 - － 기술지원은 본 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
-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산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
-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

라.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 인근 홍원연수원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측 대표단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우리측의 지방도시인 문산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남북간에 회담장소와 왕래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분 자재·장비의 수량과 품목을 확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고장장비 수리와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문제와 열차운행합의서 등도 협의하자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를 병행추진 하여 동시 개통하자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해선 우리측 구간 공사와 관련 강릉까지 연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전체분 자재·장비 수량과 품목에 합의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및 제공장비 기술지원문제 등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회의에서 남과 북은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고,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에 합의
 - 신호·통산·전력계통 자재·장비들은 앞으로 협의 확정
- 신호·통산·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 경의선 7.15-17, 동해선 7.22-24
- 제공된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남측의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해결
-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와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의 설치문제를 계속 협의
 - 열차 및 자동차 운행에 앞서 발효·이행
- 차기 실무접촉은 8월초 개성에서 개최

—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주요 내용> —

- 궤도 자재 45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34개 품목(유상공여 : 28, 유상임대 : 6) 총 79개 품목
- 신호·통산·전력계통 자재·장비
 - 추후 남측 설계에 따라 비품 일식
- 도로 자재 36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25개 품목(유상공여 : 13개, 유상임대 : 12개)
 - ※ 상기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척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마.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경의선 7.15-17, 동해선 7.22-24)한 후, 설계기준안을 확정하기 위해 제6차 실무접촉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전체분 자재·장비를 10월부터 제공하되, 노동용품·유류 등을 우선 제공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남북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추가 기술지원 일정을 확정하고 임시도로 대신 본도로 노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범위도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전체분 자재·장비를 조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며, 콘크리트혼합장 설치·운영과 고장장비 수리를 위한 기술 지원 실시일정, 신호·통신·전력계통 관련 실무적 문제들도 협의하고자 제의하였다.

또한 개성-판문역간 전철화 설비를 제공해 줄 것과 사업구간(경의선, 동해선)에서 평양(철도성)까지 통신선로를 구성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경의선 본 도로를 이용하는 문제와 이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측 입장에 긍정하지만, 군당국과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와 부록을 발표하였다.

— <합의서 요약> —

-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 신호·통산전력계통 자재장비 등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되는 데 따라 그 품목 및 수량을 첨부 1에 포함
-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라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 － 콘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 : 경의선 9.1~9.6, 동해선 9.16~필요한 기간 진행
 - － 제공장비 수라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 동해선 9.1~9.7, 경의선 9.16~9.25 진행
 -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라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제공 및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
-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함.
-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통산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 협력을 실시
 - － 남측은 신호·통산전력계통 설계를 10월 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
- 경의선·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

바.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7차 실무접촉은 북한측이 2003년 말까지 끝내기로 한 궤도부설과 도로노반공사 완료에 필요한 유류와 폭약 등에 대한 협의를 제의해 옴에 따라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긴급 요청한 폭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류 제공량 확대를 위해서는 장비가동율 등 수요량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추가 기술지원은 2003년 11월 말부터 계속 진행하고, 임시도로 이용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폭약은 우리측이 현장확인 후 필요한 폭약량을 폭과 장소, 발파량을 고려하여 주 1-2회 정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기술지원은 12월중에(동해선, 12.6-12, 경의선 12.15-21), 경의선·동해선 공사현장 상호방문은 11월 중순에 실시하고, 11월말 속초에서 제8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특히 공사현장 방문일자를 이번 실무접촉에서 확정할 것을 강조하고(동해선 11.26-27, 경의선 12.4-5), 암반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절차와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남과 북은 협의 결과를 정리한 후 제7차 실무접촉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 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
-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 이를 위한 1차 사용현장 방문 : 경의선 11.8, 동해선 11.5 실시
 -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
- 제6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3.12.15-21, 동해선은 12.6-12.12 실시
- 신호·통산전력계통 설계는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 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
-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

<암반 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 요지>

- 뉴마이트플러스 I (50mm, 25mm), 전기노관(6M) 및 관련 부속 장비 제공
 - 쌍방 협의를 통해 자재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 후 자재 잔량 및 비소모성 부속장비는 반환
- 자재는 주1회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통하여 수송하되, 1회 제공량은 동서해 뉴마이트플러스 I 16톤, 전기노관 11,200개 정도로 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제공량 및 제공횟수를 조정
- 자재는 폭약 및 노관을 구분하여 전문수송차량으로 운반하며 인도인원 이외에 화약류 관리기사 1명이 동행
 - 수송차량은 앞, 뒤면에 “화” 를 부착하고 일반자재 수송차량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송
- 자재 인도·인수는 쌍방 해당 전문가들이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북측 자재창고에서 진행
 - 북측은 수송 차량의 통행자재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조치를 하며, 남측 인도인원이 자재 압출입장부 확인에 협조
- 북측은 초기 3회 자재 사용상황을 남측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 참관인원은 화약류관리기사 1~2명 포함 총 3~4명으로 함.

사.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과 북은 동절기 전에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제8차 실무접

측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켄싱턴 스타호텔)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12월 2일 쌍방 대표단을 중심으로 동해선 공동관리구역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속초로 이동한 후 다음날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였다.

우리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와 동해선 교량상판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폭약, 휘발류, 난방기, 발전기 등 추가 자재·장비 제공에 따라 전체분 품목과 수량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북한측에 기합의된 일부 자재·장비의 품목 및 수량을 삭감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시 감호·판문역에 입환표지를 추가해 주고 궤도회로 설계에 향후 전철운행을 고려하고, 각 역에 근거리 통신망용 컴퓨터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동해선 교량상판 및 레일·침목 등 궤도부설용 자재 제공 지연으로 공사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제공해주도록 강조하였다.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확정 한 후 2004년 2/4분기부터 신호·전력·통신 공사에 착수하는 등 6개 항의 합의문에 가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약> —

- 남과 북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
 -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
 -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결정
-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
-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
- 남과 북은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
 -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결정
-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

6.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시('01.9.15-18, 서울), 남북은 “해운관계자들 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개최되지 못하였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02.10.19-22, 평양)에서 해운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 합의함에 따라 2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02.11.18-20, '02.12.25 -28)이 개최,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가서명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03.8.26-28, 서울)시 남과 북은 제3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10월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일정을 협의,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에서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장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박규식(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쌍방은 제2차 실무접촉시 가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해 각자 자기측 기본 입장을 밝히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상호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라도 부속합의서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해상항로대 설정의 경우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측 항구에서 정박 중 통신보장의 중요성 등을 거듭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와 해상항로대 단축 등을 계속 주장한 반면, 통신보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북은 이틀간 수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을 가지고 부속합의서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선박운항의 허가절차, 상대측 해역 통과시 기본원칙과 금지행위,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방안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해상항로대 및 통신보장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쌍방은 10월 12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 미진한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와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의의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
-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항로대 및 통신보장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의 장소와 날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합의

7.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문서협 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2003.8.29, 서울)시 합의된 데에 따라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조사방법, 조사용 기자재, 양묘장, 묘목 등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쌍방간 이견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협의한 이후 실무협의회 개최를 주장함에 따라 양측의 합의서(안)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2003년 2월 판문점을 통해 전달한 합의서(안)을 통해 기상·수문, 유역현황 등 사전에 관련자료를 교환하고 공동조사 후 단독조사 실시, 단독조사 후 쌍방이 협의하여 현지확인 실시를 제의하였다.

묘목지원이나 홍수예보시설설치, 양묘장건설 자재장비 등의 구체적인 수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先 단독조사 실시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사용 기자재와 임진강 북한측지역의 산림조성을 위한 묘목, 양묘생산용 기자재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03년 12월 26일 전달한 합의서안을 통해 북한측의 先 단독조사 後 공동조사 입장을 수용하되 사전자료교환, 현지조사 완료 후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 수립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제6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 건설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1차례의 적십자회담과 3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1차례 가졌다.

남과 북은 추진단 회의를 통해 면회소 설계, 규모, 착공식 등 구체적인 실무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면회소 규모 등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진단 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면회소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책임지고 건설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건설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측의 구상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북한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제5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남과 북은 제5차 회담에서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킴으로써 1년 이상 끌어오던 면회소 건설문제를 마무리짓게 되었다.

또한 2002년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을 한차례 가지고,

북한측의 참가를 확정지음으로써 체육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 남북적십자회담

가.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회의

남과 북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회의」를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 3차례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제1차 추진단 회의는 200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남과 북의 대표단은 설계, 건축, 전기 분야 등 건설기술자들로 각기 10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민병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장)	함동혁(건축전문가)
대 표	유종렬(적십자관계자) 이재호(적십자관계자) 유광수(적십자관계자) 최영운(적십자관계자) 최보원(적십자관계자) 이창욱(건축전문가) 송재원(기계전문가) 유재봉(전기전문가) 김영웅(설계전문가)	황철(적십자관계자) 김성철(적십자관계자) 류성수(건축전문가) 김성일(건축전문가) 최중춘(설계전문가) 로대현(설계전문가) 리재우(설계전문가) 리명근(설계전문가) 전주영(설계전문가)

※ 제3차 추진단회의시 우리측은 최보원, 유재봉 대표가 불참, 북한측은 김성철 대표에서 김소형 대표로 교체

남과 북은 제1차 회의에서 면회소 규모, 계획설계, 착공식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면회소 건물형태 및 기본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구체적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우선 연건평을 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계획설계는 쌍방이 각기 주관하겠다고 함으로써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실시설계는 우리측이 주관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매월 2회 정례적으로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착공식을 2003년 4월 중에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재·장비 내역서까지 제출하였다.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 단장·실무협의 5회를 통해 면회소 규모 및 설계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쌍방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쌍방은 제2차 추진단회의를 2003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어 면회소 건물형태 및 기본시설, 규모, 설계 등 쟁점사항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제1차 추진단회의를 종료하였다.

제2차 추진단회의는 2003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제1차 회의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회소의 규모 및 형태, 착공식에 필요한 설비·자재 제공, 추진단 운영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다.

우리측은 제1차 회의시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면회소 규모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안을 제시하였다. 즉 면회소의 장래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3,039평(10,047m²) 규모가 바람직하며, 이산가족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콘도미니엄(가족호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측도 면회소 규모와 관련하여 제1차 회의 시보다는 다소 후퇴한 18,000평(60,000m²)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북한측의 최종안임을 강조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금강산 지역의 풍치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10-12층을 초과하지 않는 종합센터 형태로 지을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였고, 착공식, 건물형태 등에 대해서도 각기 자기측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차기 회의 일자도 확정하지 못한 채 제2차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2차 추진단회의 이후 5개월 여가 지나도록 차기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지연되게 되면서 남과 북은 면회소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갖

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전화통지문을 서로 교환한 후에 제3차 추진단회의를 2003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추진단회의에서 쌍방은 면회소 규모 및 필수 구성요소, 완공 후 시설 관리·운영방안 등 쟁점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필수 구성요소들을 확정된 후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3,039평으로 1천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필수 구성요소들에 대해 합의한 후 연건평을 확정하자는 데는 동의하였으나, 연건평은 1만 5천평(50,000m²)을 제시하여 여전히 우리측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은 면회소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면회소 완공 후 관리비용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시설 관리·운영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완공 1개월 전 운영방안을 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제3차 추진단회의에서 상호 양보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을 모색하였으나, 규모 및 시설관리·운영 등 면회소 건설의 필수적 사항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나.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문제에 합의하면서 남북 「공동건설·공동관리」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쌍방은 적십자 실무접촉과 면회소건설 추진단회의를 열고 건설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나, 규모 등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간에 합의한 공동건설 방식으로는 시공, 시설관리·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나오고, 그때마다 이견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면회소 건설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면회소 건설방식을 어느 일방이 건설과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전담건설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구상을 남북장관급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제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도 「전담건설·전담관리」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호응해 옴으로써 새로운 건설방식을 협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측의 선 제의로 2003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남북 모두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대표단 교체가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최성익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최기성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유종렬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최창훈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황 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제5차 회담에서 쌍방은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 뿐만 아니라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등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다.

금강산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양측은 면회소 장소, 규모, 완공 후 시설·관리 운영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면회소 규모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사업, 회담, 행사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밖에 우리측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전쟁시기 및 전쟁이후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제의하고, 북한측은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문제 등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2004년 설을 계기로 실시하되, 혹한기를 피하고, 이산가족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추가 상봉을 실시하는데는 동의하면서도, 겨울철은 계절적으로 힘들고 기온이 따뜻한 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구체적 일자와 규모를 제시하였는데 반해, 북한측은 우선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를 타결하고, 기타 이산가족 사업들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면회소 착공식 이후 협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전체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교환한 후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초안 문안을 조정하고,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다.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에 대해 쌍방은 면회소를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하고, 크기는 6,000평으로 하며, 우리측이 건설과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북한측은 우리측이 금강산 현지에서 건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면회소 건설 이외의 이산가족문제는 제3차 실무접촉에서 면회소 착공식 이후 협의·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착공 이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우선은 1년여 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를 마무리 하는게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북한측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 건설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
 - 건물의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
-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되,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
-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
- 남과 북은 면회소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작·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 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
- 면회소 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
 -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약·확정
-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라·운·영을 전담
-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 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
-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
- 금강산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

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정부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화해협력의 지속을 위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분위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하였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공식의제로 제기하였으며, 북한측도 이를 수용하여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회에 참가하고 우리측이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에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열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이 실무접촉 일정을 7월 4일부터 6일로 수정 제의함에 따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이 200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하진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장정남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하진규(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무총장)	장정남(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
대 표	김승철(대한대스포츠위원회 명예총무)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안명국(대학생체육협회 상무위원) 윤용복(대학생체육협회 상무위원)

북한측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선 기조발언을 통해 선수단은 220명, 응원단은 310명을 파견하며 여자축구, 정구, 육상 등 10개 종목에 출전할 것이라 밝히고, 이동경로는 북한측 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대구 직항로를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북한측 선수단의 체류비용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통신선로를 부산아시아대회보다 확대하고, 개폐회식 행사 때에는 부산아시안게임의 전례에 따라 ‘단일팀 깃발(한반도기)’을 들고 공동입장 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의 제의사항은 우리측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개폐회식 행사와 편의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아시안게임의 선례를 따르기로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터라 쉽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시한 응원단 규모가 조직위에서 준비한 숙소의 수용능력보다 많았고 통신선로 요구규모도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판단하였다.

우리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모로 축소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였다. 이동경로의 경우에도 대구공항보다는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남북은 전체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

우리측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회참가 등록서류 제출시한(7월 21일)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시상식 때의 국가 연주 문제도 대회규정상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하게됨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로 쟁점이 되었던 응원단 규모와 이동경로, 통신선로 보장규모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하였다.

우리측은 응원단 규모의 경우 숙소의 수용능력상 250명 정도가 적당하며, 이동경로도 행사운영의 편리함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보다 적절함을 설명하였다. 통신선로도 비용문제를 들어 북한측의 양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 열린 수석대표 접촉에서 우리측은 장소가 비좁은 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상기시키고 북한측이 제시한 응원단 310명 규모를 수용하였다.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우리측 안에 동의하여 김해공항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신선로에 대해서 우리측은 남북직통전화를 총 12회선으로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국제전화 회선을 늘려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남북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합의서 요지>

- 북측은 선수임원심판원 등 선수단 200명 정도와 응원단 310명 정도, 기자단 19명 파견
- 북측은 대회조직위에 7월 21일까지 종목별 최종 선수단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
-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항공기로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측에 오며,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 이용
- 남북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
- 남측은 체류기간 북측의 편의 보장, 북측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준수
- 남북은 각각 경기에 출전, 시상식에 각각의 국기 게양,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
-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제반 경비 부담, 북측 응원단기 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 보장
- 한반도기는 남북공동입장과 남북간 경기시에 사용하며, 북측 국기게양, 국호표기는 FISU 규정 및 국제관례 적용
- 남측은 북측에 남북직통전화 12회선, 국제전화 6회선, TV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등 보장
- 기타 문제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
- 제반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
- 추후 실무절차 문제는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